

이재명, 호남권 압승 ‘민주당 적자’ 정통성 확인

민주당 뿌리 호남 권리당원李에 몰표

비상계엄 후 정국 안정·지역발전 염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도 압승을 하며 당의 적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민주당 독점제제와 이 후보에 대한 반감이 투표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호남민들은 비상계엄 이후 정국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이 후보에게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3~26일 치러진 호남권 순회경선 결과 이 후보가 88.69%의 득표율로 압승을 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 7.41%, 김경수 후보 3.90% 순이다.

호남권 투표율은 53.67%로, 선거인단 37만4141명 중 20만809명이 투표했다. 앞선 경선에서는 충청권이 57.62%, 영남권이 70.85%를 기

록했다.

호남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권리당원 수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호남권 권리당원 수는 37만4141명으로, 충청권 11만1863명, 영남권 10만3352명보다 3배 이상 많다.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은 지난 대선 경선이나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경선이 2021년 20대 대선 경선 호남권 투표율(55.23%)보다 수치로는 156%포인트 낮지만, 권리당원 수가 20대 경선(20만 명)보다 17만 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8만 명의 권리당원이 더 투표한 셈이다.

앞선 전당대회 투표율과 비교해도 이번 경선 투표율이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전당대회 투표율이 광주 34.18%·전남 37.52%를 기록했고, 2024년 전당대회 때 호남권 투표율이 20%대로 폭락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경선 투표율(53.67%)은 두 배 이상 수직상승한 셈이다.

당초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강해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투표를 저조가 우려됐으나, 비상계엄 후 정국 안정과 지역발전을 염원한 호남민들이 전략적 투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첫날 투표율이 23.29%로 저조하자 흥행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2일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안방을 내주면서 반민주당 정서가 확인된 만큼 위기감이 컸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대선을 대하는 호남민들의 정치민도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진보계열



정당에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대선 만큼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뭉치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심장부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둬 민주당의 적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고 보는 것도 이 같은 시각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번이 없는 한 이날 네 번째 수도권 경선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1

김영록 지사, 이재명 후보에 양곡관리법 개정 등 건의

김영록 지사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게 양곡관리법 개정 등 농정 현안들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호남경선을 앞두고 전남농업기술원 청년창업타운에서 열린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에서 이 예비후보에게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국가 차원의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편,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미래 농업의 전초기지인 전남이 AI 농업혁명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농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전폭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농업은 더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 핵심 산업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김 지사는 간담회 이후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찾아 AI 농업 발전에 관한 의견도 함께 나눴다.

“윤석열 재구속, 지기연 심우정 즉각 탄핵”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지난 25일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정치권은 지기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윤 전 대통령에 구속 정치결정을 내린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게 됐다. 심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출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적 죽이기 기소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기득권 법조 카르텔에 의해 내란 수사와 이에 대한 처벌이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심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나 지 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최소한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려면 법까지 어겨가며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검찰 또한 온갖 개인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박선영 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5·18을 왜곡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즉각 사퇴”를

“5·18북한군 개입 몰라 발언, 박선영 위원장 즉각 사퇴”

민주 광주시당 “5·18에 대한 모독·왜곡…고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5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 설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중대한 역사 왜곡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은 국가 권력의 총칼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위대한 항쟁이며 당시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의 공식 조사와 역사적 검증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5·18에 관한 왜곡 및 허

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박 위원장의 발언은 실정법 위반의 여지를 남기는 심각한 경계선에 있으며 광주시민들에게 큰 상처이자 모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구인데도 극우 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박 위원장은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며 “박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개인발언을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양부남·민형배 의원은 “박 위원장의 발언은 심각한 5·18 모독이

다”며 “국회의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광주지역 국회의원 차원에서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인철 의원은 “박 위원장의 역사 의식 수준이 현 정부 역사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김문수는 김구 선생을 일본인이라고 했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5·18에 대해 똑같은 답을 한다며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헌법정신 수호세력이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북한군 개입설은 대법원 판결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두환·지만원 등에 의해 완전 날조된 거짓말이란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입증됐다”며 “박 위원장이 모른다고 한 것은 5·18의 진실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했으며 스스로 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이재명 선거법, 이르면 대선후보 등록 전 대법 결론 가능성

대선 후보 등록 기간 10~11일전 결론 가능성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흘간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열고 집중 심리를 진행한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대선(6월3일) 전에 판결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합에 회부했다. 또한 전합 회부를 결정한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전합은 첫 회의 이후 이를 만일 24일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전합 합의기일이 지정되면 언론과 일반에 공개해왔는데, 아

직 다음 합의기일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합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까지 진행한다. 이달 정해진 합의기일을 마친 상태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1심을,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

/뉴스1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

국토부, 지원 방안 마련…광주지방변호사회 유가족 실태 점검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유가족의 지원을 위한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움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며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사항도 같이 점검하게 된다.

현황 조사는 유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의료치료, 생활지원 등 유가족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해 특별법 취지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담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친명·비명·수박” 분열·배제 언어 결별하자”

김동연, 민주당 3차 순회경선 호남권 합동연설회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호남권 경선 발표에서 “가장 민주당다운 비전과 정책으로, 호남의 선택으로 ‘당당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80년 5월 광주의 정신이 다시 한번 나라를 구했다”며 텃밭 민심에 구애했다.

김 후보는 충청권, 영남권 순회경선에 이어 이날 호남권 경선에도 야구복을 입고 입장했다. 그는 이종범 선수의 등번호인 7번이 새겨진 기아타이어거즈의 전신 해태타이어즈의 붉은색 점퍼를 입었다.

후보 등장곡은 BTS(방탄소년단)가 2015년 발표한 ‘마 시티(Ma City)’ 노래 중 광주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 파트는 광주 출신이기도 한 제이홉이 랩을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소속 호남 출신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저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며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며 “저는 민주당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다. 반드시 더 큰 민주당을 만들고 더 크게 이기는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서해안 벨트 조성 등 호남 지역 공약도 역설했다.

그는 “호남의 꿈은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전남북, 광주를 잇는 서해안 신재생 에너지 벨트, AI(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대기업을 도시 광주, 대한민국 예수도도로 발전하는 전북, 이차전지, 첨단소재 클러스터 전남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마지막 수도권 순회경선 1만명 운집

“반드시 정권교체”…수시간 전부터 응원봉·콘서트장 방불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결정되는 27일 경선 행사장은 축제 열기로 달아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을 대표해 대선 본선에 진출할 후보자를 확정한다.

경선에 출전한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후보 3명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대의

원·권리당원 등 지지자들로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민주당 공보국이 집계한현장 인원은 1만5000명으로, 극장식 실내 좌석 8000석이 빠틈없이 채워진 모습이었다.

합동연설회 세시간 전인 낮 12시 행사장 입구는 이미 입장을 기다리는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곳곳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간식을 먹는 지지자들 모습은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국힘 2차 투표…韓 단일화 vs 원샷 경선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의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27일 시작된 가운데 지지를 호소하는 각 후보들이 발언이 이어졌다.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할 경우 단일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화빌딩 캠프에서 지지들과 만나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한 대행 출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우리 당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경선을 통한 단일화 방식에는 안 후보와 뜻을 같이 했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며 “그게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길이라면 흔쾌히 하겠다”고 적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경선 투표에서 드라마를 만들어 주면 저 한동훈이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겠다”고 했다.